

〈일반논문〉

## 1950년대 초 북한 과학원의 창설과 활동: 참여와 동원의 이중주\*

류 승 주 \*\*

〈목차〉

- I. 머리말
- II. 전시 과학기술 동원계획 변화와 과학원 창설 결정
- III. 과학원 조직과 인적 구성
- IV. 과학원 활동과 '당적 통제'
- V. 맺음말

[국문초록]

1952년 12월 창설된 북한 과학원은 자연·기술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망라한 북한 학술부문 종합연구기관이다. 본고에서는 과학원의 창설 결정과정, 인적 구성, 초기 활동과 자율성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가계획위원회 과학연구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력을 조직·동원하려던 북한 당국의 계획은 과학자 스스로의 요구에 의하여 과학원이라는 중앙집권적 연구기관이자 과학자들의 자율적 공간 창설로 수정되었다.

과학원은 구성원들의 민족국가 건설 참여라는 준(準) 정치적 자기실현욕구의

\* 이 논문은 2022년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

무대이자 국가주도적 과학기술 지도기관이라는 양면성을 가졌다. 북한 당국은 과학자들을 예우하고 검열 면제의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전후복구의 긴급한 상황과 일련의 정치적 숙청, 과학원 구성원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맞물려 과학원의 사상적 경직성은 점차 심화되었고 사상분야에 대한 당적 통제는 강화되어갔다.

□ 주제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과학자대회, 조선로동당, 김일성, 백남운, 한홍수, 정치경제학아카데미아, 국가계획위원회

---

## I. 머리말

근대 이후 서양 각국에서는 과학기술과 사상·지식을 국가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한 국가 연구기관, 즉 국립과학아카데미<sup>1)</sup>를 설치하였다. 영국 왕립학회(The Royal Society of London for the Improvement of Natural Knowledge, 1660년 창립) 및 그 구성기관인 과학아카데미(Académie des Sciences, 1699년 창립)와 프랑스 과학아카데미(Académie des sciences, 1666년 창립)와 프랑스 학술원(Institut de France, 1895년 창립), 러시아과학아카데미(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РАН, 1724년 창립)와

---

1) 대한민국학술원과 북한 과학원의 공식 영문명칭은 각각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와 'the Academy of Science of DPRK'이다. 국제적으로도 National Academy of Sciences라는 명칭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 각국의 국가연구기관을 통칭하여 '과학아카데미'라 하였고, 1952년 평양에서 개원한 과학아카데미는 공식 명칭인 '과학원'이라 지칭하였다.

미국의 국립 과학·공학·의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NASEM) 등이 전통적 형태의 과학아카데미이다. 이들은 대개 민간의 주도로 설립되어 자율적으로 활동·운영하되 국가의 예우와 재정 지원을 받으며 국가의 자문에 응한다. 한편 20세기 들어 소련과학아카데미(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가 설립된 이래, 이를 모범으로 하여 사회주의 각국에서는 과학아카데미를 창설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 또는 실행하며, 국가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는 등 집단주의적 목적 하에 운영되었다.<sup>2)</sup>

북한은 소련의 과학아카데미를 본받아 1952년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을 설립하였다. 북한 과학원은 자연·기술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망라한 북한 학술부문 종합연구기관으로, 전후복구와 산업발전을 위한 과학적 제 문제들을 해결하며 과학·기술분야와 생산부문 간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성에서 창설되었다. 과학원을 통해 북한 정권은 지식계층을 조직화하고 긴급한 연구과제 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식인·과학자들은 지속적 연구활동을 보장받았다.

북한 과학원에 대한 기존 연구는 지성사·교육사·과학사 연구 속에서 이루어졌다. 김용섭은 남북 학술원과 과학원의 역사를 다룬 저서에서 북한 과학원의 뿌리를 1930년대까지 거슬러 추적하였다. 그는 식민지시기 민족주의 학술운동의 명맥이 북한의 국가주도적 학술연구기관 설립 의지와 맞물려 과학원 창설로 완결되었다고 정리하였는데, 북한 내 민족지식인들의 존재를 부각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up>3)</sup> 강호제는 1947년 창설

2) Loren R. Graham, *The Soviet Academy of Sciences and the Communist Party, 1927~1932*, Princeton Univ. Press, 1967; Laumulin, Chokan, “Science and social policy: underpinning of Soviet industrial paradigms,” Ph.D. diss., University of Cambridge, 2019 참고.

3) 김용섭, 『남북 학술원과 과학원의 발달』, 지식산업사, 2005.

되었다가 곧 김일성종합대학에 흡수된 북조선중앙연구소를 과학원에 선행한 과학기술 종합연구기관으로 보았다. 북조선중앙연구소는 과학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지만, 이후 과학기술인력이 폭넓게 양성·확보되어 1952년 과학원을 창설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sup>4)</sup> 장초는 과학원 창립을 통해 과학연구사업의 조직지도체제가 구축되었다고 정리하였다.<sup>5)</sup> 이들 연구는 과학원의 성립과 발전을 복한 과학기술 발전, 또는 민족주의 학술운동 진행 등 내적 연관 속에서 해명한 의미 있는 연구성과들이다. 그러나 연구들은 과학원을 각 분야 발전의 매개체로 놓았을 뿐, 과학원 자체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또한 과학원의 활동에 대하여 복한 당국의 과학기술 동원정책이 어떻게 관철·변화되었는지 설명할 뿐, 과학원 구성원들의 인식과 주체적 활동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20세기 후반 신생 독립국이자 사회주의국가이며 개발국가였던 북한에서 과학원의 역사는 단순한 학술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해방 후 남북의 정치적 분단은 사회·경제적 분단 뿐 아니라 기술·지식분야의 분단을 초래하였다. 지식인과 과학기술인들은 다양한 조건과 이유에서 남과 북으로 흩어지고 다시 집결하였다. 다양한 경로로 북한사회 구성원이 된 과학자·기술자들은 어떤 기대와 정치적 입장 속에서 과학원에 참여하였으며 어떻게 체제내화되어 갔을까? 인민민주주의 정권으로 출발하였다가 급격한 사회주의적 전환과 사상적 경직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지식인·과학자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었으며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나갔는지 규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한편 과학원 결정의 논의과정과 주체에 관한 문제는 본 논문의 직접적

4) 강호제, 『북한과학기술형성사 1』, 선인, 2007, 제2장. 강호제는 과학원의 활동이 전문 과학연구활동과 생산현장에 대한 기술지원활동을 병행하였음을 밝혔다.

5) 張超, 「북한의 공업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 연구(1945~1970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제2장 2절.

인 해명 과제이다. 국가과학아카데미 설립을 위해서는 자체의 학문적 역량, 즉 과학·기술인재가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연구장소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쟁으로 인해 황폐한 평양에서 북한은 어떻게 과학원 창설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었을까? 생존의 여건마저 열악하여 후방 정비와 복구·건설사업이 시급했던 상황에서 과학원 창설이 결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누가 이 결정을 주도하고 또는 지지하였을까?

과학원이 설립된 계기와 논의구조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영도력이 관철된 모델로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 1952년 4월 27~29일간 진행된 과학자대회에서 김일성이 ‘과학아카데미’ 창설을 제의하였고 내각이 과학원 창설을 결정하여 1952년 12월 과학원이 개원하였다는 일직선적 서술이다.<sup>6)</sup> 과학원 창설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문제의식이나 논의절차를 생략하고 김일성의 탁견에 의해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령의 영도를 역사발전의 계기로 설명하는 북한 역사학의 기본인식이기도 하다.<sup>7)</sup> 한편 한국의 연구들은 북한 과학원 창설을 북한 내적 과학·학술 발전과정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과학자대회 이전에 과학원 창설방안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방안을 마련한 주체가 누구인지 해명하지는 못하였는데, 백남운 등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과학원 창설을 주장했다고 추측하거나,<sup>8)</sup> 김일성 예하 북한 지도부가 종합연구기관 창설을 오랫동안 추구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을 뿐이다.<sup>9)</sup>

본 논문은 우선 과학자대회 당시 북한의 전시 과학기술 동원계획에 과

6) 과학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의 연혁』, 과학원출판사, 1957, 12~13쪽; 윤명수, 『조선과학기술발전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50쪽.

7) 이주철, 「북한의 조선로동당사 서술 현황 연구」, 『북한의 한국사 연구동향(2)』, 국사편찬위원회, 2003.

8) 김용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의 창립과 조정」, 『남북 학술원과 과학원의 발달』, 191~199쪽.

9) 강호제, 『북한과학기술형성사』, 101~109쪽.

학원 설립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sup>10)</sup>에서 출발하여, 과학원 설립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과학원의 조직 구성과 초기 활동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특히 과학원의 참여 주체인 과학자 지식인들의 존재와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1950년대 초 북한 내 의사결정방식을 재고하며, 과학자·지식인 집단이 북한 정권에 참여한 의미와 결과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II. 전시 과학기술 동원계획 변화와 과학원 창설 결정

북한은 해방 후 1950년까지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부문에 풍부한 토대를 구축하였다.<sup>11)</sup> 1946년 10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을 창립한 이래 대학·기술전문학교의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통신대학·야간대학 등 성인교육체계를 확충하였다.<sup>12)</sup>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인력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1947년 ‘북조선중앙연구소’를 잠시 설치한 바

10) 이는 1952년 1월 내각에서 승인한 국가계획위원회 규정 및 『로동신문』 1952년 5월 7일 기사와 『김일성선집』 4(1953)에 게재된 과학자대회 연설문을 통해 입증되는데, 본 논문 2장에 후술한다.

11) 한국전쟁 이전 북한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 부문의 발전에 관한 대표 연구성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강호제, 『북한과학기술형성사 I』, 제2장; 신효숙, 「해방 후 북한 고등교육체계의 형성과 특징: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권 제2호, 1998; 김기석, 『일란성 쌍생아의 탄생, 1946: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 교육과학사, 2001; 김근배,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분화 - 과학기술계 학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2권 2호, 2000; 「월북 과학기술자와 흥남공업대학의 설립」, 『아세아연구』 vol.40 No.2, 1997; 김태운, 「해방 직후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기관 설립과 체제형성(1945~1950)」, 『통일과 평화』 10집 2호, 2018.

12) 강호제, 『북한과학기술형성사 I』, 83~90쪽.

있었다.<sup>13)</sup> 이후 북한 당국은 내각 각 성을 중심으로 인민경제계획의 실행을 위한 과학기술 동원·발전을 추구하였다.<sup>14)</sup> 한편 사회과학부문에서는 중앙학술기관이자 교육기관으로 1950년 1월 정치경제학아카데미야가 설치되었다.<sup>15)</sup>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북한의 학문분야 육성사업은 학술기관을 국가주도적으로 조직화·중앙집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sup>16)</sup>

1951년 여름 한국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북한 당국은 전쟁으로 인한 파괴를 복구하고,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의 경제개발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sup>17)</sup> 1952년 1월, 전후복구발전의 중심기관인 국가계획위원회를 개편·강화하는 조치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그 임무와 권한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였다.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 및 문화건설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인민경제계획 초안을 작성하며 인민경제 복구 및 발전에 관한 조직적 사업을 진행하며, 성·내각 직속국, 인민

1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81호, 북조선중앙연구소 설치에 관한 결정서(1947년 2월 7일)」, 『북조선법령집』, 49쪽. 북조선중앙연구소는 전문인력 부족에 따라 김일성종합대학에 기능을 이관하고 폐쇄하였다. 강호제, 『북한과학기술형성사 I』, 102~104쪽.

14) 張超, 「북한의 공업부문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 마련과 활용」, 266~267쪽.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184호 정치경제학아카데미야 설립에 관한 결정서(1949년 12월 8일)」, 『북한관계사료집』 22, 337쪽. 정치경제학아카데미야 제1기 수업 과목은 맑스레닌주의, 정치경제학, 조선사, 세계사, 조선어, 로어, 자연사, 수학, 논리학이었다. 「정치경제학아카데미야 수업시간표(1950.2.15.)」 국립중앙도서관 해외한국관련자료, NARA RG242 Captured Enemy Documents. North Korean Documents 09/1953-01/1958, 190/16/34/1/E.UD 300-C/Box43, Doc. No.201218.

16) 류승주, 「북한의 민족문화전통과 항일혁명전통 수립(1945~1967)」,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95~97쪽.

17)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선인, 2005, 451쪽.

위원회 및 협동단체 중앙기관들에 부과된 인민경제 및 문화의 건설에 관한 제과업의 수행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가계획위원회는 내각과 인민위원회 및 협동단체에 계획 마련과 추진을 지시하고 보고받을 권한을 가졌다.

특히 「규정」은 국가계획위원회에 과학연구사업을 조직 지도할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였다. 소련 등 외국의 선진 과학기술 성과를 도입·적용하고(16조), 중대한 인민경제적 문제들을 연구하며, 각 기관의 과학연구사업을 계획하고, 호상 연결 부합시키는 사업을 조직하라는 것이었다(20조). 과학사업을 계획하며 연결하는 기관을 새로 조직하도록 하였다(21조).<sup>18)</sup> 이 조항에 의거하여 ‘과학사업을 계획하며 연결하는 기관’으로서 1952년 초 국가계획위원회 내에 ‘과학연구국’이 조직되었다. 과학연구국은 전시 요구를 충족하고 복구건설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수립, 배분하고 물질적 방조를 주며, 연구성과를 산업 현장에 연계할 임무를 가졌다. 이를 통하여 모든 과학자·기술자들이 국가로부터 부과된 연구과제를 예정된 기간 내에 책임 있게 수행하여 연구의 성과가 북한 전시 필요를 직접 충족시키도록 하였다. 북한 내부자원 동원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계승과 고문헌·고서적·유물 발굴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정리·이용할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과학연구국의 중요 임무 중 하나였다.<sup>19)</sup>

즉 1952년 북한 당국은 국가계획위원회 내에 과학연구국을 신설하여 이를 중심으로 과학연구사업을 통합적으로 지도 강화하며 과학기술 연구사업과 산업부문 간 유기적 연관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과학연구국은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3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하여(1952년 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 1952년 제1호, 2~6쪽.

19) 김일성, 「과학자대회에서 진술한 연설(1952년 4월 27일)」, 『김일성선집』 4,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년(제2판), 146~147쪽.

경제 및 문화건설에 관한 연구사업에서 포괄적 권한을 가졌으며, 자연과학, 기술과학 뿐 아니라 민족문화유산 수집·정리·보급사업까지도 관할하였다.

한편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중앙집권적 연구·교육기관으로서 북한은 정치경제학아카데미야를 확대 개편하였다. 1952년 3월 27일 내각은 조선력사편찬위원회와 조선어문연구회를 정치경제학아카데미야에 이관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과학연구사업의 체계를 단일화하여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력사편찬위원회와 조선어문연구회는 정치경제학아카데미야 산하 '조선력사연구소'와 '조선언어학연구소'로 이관 개편되었다.<sup>20)</sup>

이와 같이 당초 북한의 전시 과학기술 동원계획은 자연·기술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각각 과학연구국과 정치경제학아카데미야를 통해 조직화·중앙집권화하겠다는 이원적 관리체제 구상이었다. 이 구상에서 과학아카데미 설립은 고려되지 않았다. 과학원의 설립 역사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은 과학자대회에서 김일성이 제의하여 과학원이 창설되었다는 것이고, 한국 측 연구들은 북한 당국이 과학원 창설을 미리 의도하고 과학자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위의 「규정」 뿐 아니라 아래에 서술할 몇 가지 정황을 볼 때, 과학원 창설은 과학자대회 개최 전 북한 당국의 방침으로 마련되었던 것도 아니며, 김일성의 단독 "교시"로 결정된 것도 아니었다.

1952년 4월 27일부터 3일간 평양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개최된 전국 과학자대회는 과학연구국이 주관한 첫 공식 사업이었다. 평양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개최된 과학자대회 주석단에는 김일성(수상)·김두봉(최고인민

20) 「내각 결정 제57호 조선력사편찬위원회 및 조선어문연구회를 정치경제학아카데미야에 이관함에 관하여(1952년 3월 27일)」, 『내각공보』 1952년 제6호, 129쪽.

회의 상임위 위원장)·박현영·홍명희·허가이(이상 부수상)·박정애·리승엽·박창옥(이상 조선로동당 비서)·내각 각 상 및 각계 인사들이 임석했으며, 각 대학 및 연구소·실험실 소속의 과학자 190여 명이 참가하였다. 북한에 체류중인 외국인 과학자·기술자들도 초대되었다.

먼저 교육상 백남운이 과학연구사업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후 김일성이 국가과학사업의 방향과 과학자들의 과업에 대하여 연설하였다. 대회 최종일인 4월 29일, 참가 과학자들의 결의로 「전국 과학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김일성 장군에게 드리는 멧세지」를 채택하였다. 대회 종료 후 29~30일 양일에 걸쳐 5개 과학분과(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초이론, 공업, 농업, 의학)별 연구보고회가 진행되었다.<sup>21)</sup>

백남운은 보고를 통하여 북한의 지난 과학연구사업을 총결하고 전후 복구건설을 위한 당면과업을 제시하였다. 그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일관된 계획성과 통일된 강력한 지도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각 성(省) 및 과학연구국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각 성은 산하 각종 연구소와 각 교육기관들의 과학연구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과학연구국은 전시하의 과학 동원태세로써 통일적으로 호상 관련된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소와 연구소 사이, 대학과 대학 사이, 연구소와 대학 사이, 그리고 과학연구기관과 생산기관 사이들에서 사업상의 유기적 연관을 긴밀히 조직하여야 하겠습니까.”

백남운의 계획에서 과학연구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산업부문과 연계하

21) 「전국과학자대회 진행」, 『로동신문』 1952년 5월 7일; 도상록, 「과학원이 창설되기 까지」, 『인민들 속에서』 4,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181쪽; 리승기, 「비날론에 깃든 이야기」, 『인민들속에서』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62, 217쪽.

는 데 있어 과학아카데미의 존재는 들어있지 않았다. 연구소·교육기관 과학연구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임무는 내각 각 성이 맡고, 새로 조직된 과학연구국은 각 기관 간 유기적 연락과 통일적 동원체제 관리를 담당한다는 계획이었다.<sup>22)</sup> 백남운은 교육상이자 과학자대회의 기초연설자로서 전후 북한 과학기술 통합계획에 깊이 관여한 인물인데, 그의 연설에서 과학원에 대한 언급이나 어떤 암시도 없었음을 볼 때 북한 당국이 과학원 설립을 미리 계획하였다는 추정은 타당하지 않다.

백남운의 보고 후 참석자들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장익환(김책공업대학 학장)·원홍구(김일성종합대학 교수, 조류학)·계상훈(증공업성 기사장)·김중희(수의과학연구소장)·김병무(의학)·로용하(농학)·한홍수(인류학)·리승기(화학)·박태훈·김응하·신건희·최응석·김봉수·한규학·최한식·정진태·현옥원·곽대홍·최삼열 등이었다.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토론자들은 전쟁 승리를 위해 과학·기술적으로 기여할 것을 결의하면서, 집체적 연구방법 강화를 위한 조직 확립의 문제, 과학 각 분야간의 유기적 협조와 과학과 생산간의 긴밀한 연계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는데 토론문이나 토론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sup>23)</sup>

김일성은 대회 이튿날인 28일 연설하였다. 『김일성선집』, 『김일성저작집』 등 북한에서 간행된 김일성 저작류에는 연설 날짜가 대회 첫날인 ‘4월 27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28일’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sup>24)</sup> 백남운의

22) 「1951년 공화국 과학연구사업의 총결과 1952년 당면과업에 대하여, 교육상 백남운」.

23) 「전국과학자대회 진행」.

24) 과학자대회 개최 사실을 보도한 『로동신문』 1952년 5월 7일자 기사와 리승기의 회고에는 김일성 연설이 백남운과 과학자들의 보고·토론 후, 대회 말미에 이루어졌음이 기록되어 있다. 『로동신문』에 실린 백남운의 보고문은 전문이 아닌 축약본 [要旨]임에도 신문 2면 전체를 차지할 만큼 긴 분량이며, 토론자 역시 기록된 인원만 19명에 달하였으므로, 김일성이 대회 1일째인 27일에 연설하였다는 것은 시간

보고와 여러 과학기술자들의 토론 후 이어진 김일성의 연설은 대회를 총결하는 연설이었다. 연설문은 과학자대회 개최 이전에 대강의 내용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나,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고려하여 일정 정도 가감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

만일 김일성의 선제적 제안으로 과학원 창설이 발기된 것이라면, 김일성의 연설에 과학원 창설의 주·객관적 조건을 해명하고 소련 과학아카데미의 선례를 설명하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sup>25)</sup> 그러나 김일성의 연설에는 과학원 창설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 설명이 전혀 없다. 또한 과학연구사업의 모든 부분에서 소련의 모범을 강조하고 있으나 쏘련과학아카데미의 모범을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 과학원 창설에 관련해서는, 긴 연설 끝부분 각 연구기관의 연계·협조를 설명하는 가운데 “연구사업 또는 탐구사업을 집체적으로 조직 실시하기 위하여 과학원 즉 과학 아카데미를 조직하도록 할 것입니다.”<sup>26)</sup> 라고 덧붙였을 뿐이다. 해당 연설은 4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데, 과학원 창설을 언급한 것은 위의 단 한 문장 뿐이었다. 그 외 연설 내용은 백남운의 보고 내용과 대체로 같은 맥락이었으며, 과학연구사업의 통합적 발전과 산업현장과의 유기적 연계, 이를 위한 국가(각 성 및 과학연구국)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백남운의 기초연설에서 과학원 창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김일성

---

상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김일성의 연설도 40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이다. 대회 준비위원이었던 도상록은 김일성이 대회 2일째(28일)에 연설하였음을 명시했다. 도상록, 「과학원이 창설되기까지」, 181쪽; 리승기, 「비날론에 깃든 이야기」, 217쪽. 연설 날짜가 ‘27일’로 기록됨에 따라 해당 연설이 과학자대회의 ‘개막연설’(강호재, 『북한과학기술형성사』, 107쪽)이었다는 오해, 또는 과학원 창설을 김일성이 주도하였다는 관념이 강화되었다.

25) 실제로 김일성은 연설에서 “쏘련의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120쪽), 연설의 모든 대목에서 소련의 선례를 일일이 거론하였다.

26) 「과학자대회에서 진술한 연설」, 148쪽.

의 총결연설에서는 장문의 연설 가운데 단 한 문장으로 과학원을 조직하라는 지시가 최초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로동당, 내각의 교육 및 과학기술부문)이 애초에 과학연구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부문의 통합과 생산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하였으나, 과학자들의 토론과정에서 과학원 창설 필요성이 제기·토론되고 김일성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총결연설에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52년 10월 『로동신문』 기사가 당시의 논의과정을 진실하게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는 “과학원 창설은 지난 4월에 개최되었던 전국 과학자대회에서도 다수의 과학 일꾼들에 의하여 열렬히 토론되었으며 그의 시급한 설치가 요망되었던 바 그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의 발의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sup>27)</sup> 과학원 설립방안이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자 그에 대한 반대 또한 격렬했다. 도상록에 따르면 “당시 반당종파분자들은 일부 나라들에서는 독립국가로 된 후 10년 또는 수십년이 지나서야 과학원을 창설했는데 광복된 지 몇 해밖에 안 되며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과학원을 논의할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과학원 창설문제를 한사코 반대”했다. 이에 김일성은 과학원 설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반대 의견을 감안하여 한 마디로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아직은 과학연구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다.

대회 마지막 날 채택된 「전국과학자대회 호소문」에도 과학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우리는 반드시 각 방면에 걸친 과학연구기관의 정연한 체계를 수립하여 과학연구사업에 있어서의 계획성과 조직성과 집체성과 지도성을 가일층 제고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는데,<sup>28)</sup> ‘정연한 체계’가 구체

27) 「전체 인민들의 환영 지지 속에 공화국 과학원 창설, 『로동신문』 1952년 10월 22일.

28) 「전국 과학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1952년 4월 29일)」.

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학원인지 과학연구국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과학자대회를 보도한 『로동신문』 기사에도 마찬가지로 과학원 또는 과학 아카데미라는 명칭은 언급되지 않았다. 과학연구사업의 중심기관을 기존 결정대로 과학연구국으로 할 것인지 신설 과학원으로 할 것인지 결론짓지 못하였던 것이다.

과학자대회 폐막 후 1주일여가 지난 5월 7일 내각 소회의에서 내각 수상 김일성은 과학원 창설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는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도 과학원을 창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①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을 통일적·계획적으로 조직 지도, ② 과학연구역량을 집중하여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해결, ③ 유능한 과학자들을 육성하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한 시일 내에 선진국가들의 수준으로 발전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sup>29)</sup> 즉 과학원은 과학연구국을 대체하는 조직으로 설립이 결정되고, 내각 결정 제86호로 ‘조선과학아카데미’ 조직이 결정되었다.<sup>30)</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과학원 창설은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었고 김일성의 단독 제안으로 수립된 것도 아니었다. 과학자대회 당시 토론을 통해 제기되고 논쟁을 거쳐 김일성이 받아들였고, 이후 내각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기존 과학연구국과 과학아카데미 중심의 계획은 과학원 창설방안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과학원의 창설은 북한 과학자·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던 오랜 숙망을 실현시킨 것이었다. 북

29) 「과학원을 창립하며 건축설계 현상모집사업을 진행할 데 대하여(1952년 5월 7일)」, 『김일성전집』 15,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4~5쪽.

30) 「내각 결정 제86호, 조선과학아카데미 창립에 관하여(1952년 5월 7일)」, 『조선중앙년감 1953』, 106쪽.

한 당국은 분단과 전쟁과정에서 북한이라는 정치적 공간을 선택한 과학자들에게 과학원이라는 형태로 자율적 연구공간이자 준(準) 정치적 학술운동을 펼칠 무대를 제공하였다. 과학서기장 장주익은 과학원 창설에 대해 “형식적인 창설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전부였다고 표현하였고<sup>31)</sup> 홍명희 역시 과학원은 실천적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술회하였다.<sup>32)</sup> 이들이 말한 ‘정치적 목적’ 또는 ‘정치적 의미’란 과학자·지식인의 현실참여욕구를 충족시켜 북한 정권에 아울러야 했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교육상 백남운을 비롯한 일군의 지식인·과학자들은 일제하 중앙아카데미 창설을 논의하였고, 해방 직후에는 조선학술원을 창설하여 신국가 건설을 위한 중앙정책연구기관이자 교육기관의 임무를 자임한 바 있었다. 민족주체적인 중앙학술기구의 성립은 이들 지식집단의 오랜 숙망이었다.<sup>33)</sup> 따라서 과학원은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율적·주체적 공간으로서 기대되었을 것이다.

31) 「소련대사관 제1서기관 바코프 I.S.의 일지, 1954년 3월 2일」, 『북한관계사료집』 77, 14~17쪽.

32)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6년 6월 11일, 14일)」, 『북한관계사료집』 73, 464, 466~467쪽.

33)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112~117쪽; 김용섭, 「과학자들의 ‘중앙아카데미’ 구상과 조선학술원 성립」 『남북 학술원과 과학원의 발달』, 18~49쪽.

### Ⅲ. 과학원 조직과 인적 구성

1952년 5월 7일 내각은 ‘조선과학아카데미’ 창립을 결정하고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과학아카데미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홍명희(부수상), 부위원장 정준택(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백남운(교육상), 서기장 한홍수, 위원 계응상·김승화·도상록·리병남·박창옥·최삼열·최창익·최창하·최철환·정진태·김광진으로 구성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과학아카데미 기구와 규정, 예산 등 구체안을 작성하여 7월 15일까지 내각에 제출할 것, 8월 15일까지 과학아카데미를 개설할 것을 지시·결정하였다. 과학아카데미 창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인민경제계획 수행과 제반 복구 건설사업을 위한 과학 방면의 역할을 보다 성과 있게 수행
2. 국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
3. 전체 과학자들의 과학연구사업을 통일적 및 계통적으로 조직 지도<sup>34)</sup>

창립준비사업은 예정보다 지체되었다. 내각은 1952년 10월에서야 ‘과학아카데미’가 아닌 ‘과학원’ 조직에 관한 내각 결정을 새로이 채택하고 과학원 조직의 기본 구성을 완료하였다.<sup>35)</sup> 원장(홍명희), 부원장(최삼열), 서기장(장주익)과 원사·후보원사를 임명하고,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과학원은 “조국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금후 공화국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적의 만행에 의하여 파괴된 산업·운수·교통·체신 및

34) 「내각 결정 제86호, 조선과학아카데미 창립에 관하여」.

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183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조직에 관하여(1952년 10월 9일)」, 『로동신문』 1952년 10월 22일.

교육·문화 기관들과 도시 및 농촌들을 복구 건설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화국 과학계 앞에 제기되는 복잡한 과학적 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공화국의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임무를 조국 앞에서 영광스럽게 수행”할 임무를 가졌다. 과학아카데미와 과학원의 창설 목적은 변화된 바 없이 거의 동일하며 명칭만 ‘과학아카데미’에서 ‘과학원’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주요 구성원에도 거의 변화가 없으나, 과학아카데미 창립준비위원회 서기장이었던 한홍수가 숙청되어 장주익이 그 자리를 대신한 점이 눈에 띈다.

11월 8일 과학원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과학원 상무위원회 위원 및 각 부문 연구소를 구성하고 소장을 선출하였다. 12월 1일 과학원이 정식 개원하였다. 전시 상황이었으므로 과학원은 통합된 공간을 갖지 못했다. 과학원 본부만 평양 모란봉의 국립중앙박물관 지하에 두었고, 나머지 연구소들은 지방에 분산 소개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소재지인 평남 순천군에 경제법학연구소, 력사연구소, 물리수학연구소가 놓였고, 김책공업대학이 있는 평북 피현군에 공학연구소, 평양의학대학 소재지인 평북 의주·영변·정주에 의학연구소, 청수화학공장이 있는 평북 삭주군에 화학연구소, 평북 정주와 차령관에 농학연구소가 임시로 자리를 잡았다. 평양 모란봉 중앙력사박물관에는 과학원 도서관과 물질문화사연구소가 있었다.<sup>36)</sup>

1952년 5월 7일 내각 결정을 통해 결정된 조선과학아카데미 창립준비위원회 조직과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36) 『과학원의 연혁』, 19쪽.

〈표 1〉 조선과학아카데미야 창립준비위원회

| 직책       | 이름   | 직업                         | 전공    | 최종학력지(학교)    | 해방당시 활동지              | 출신지     |
|----------|------|----------------------------|-------|--------------|-----------------------|---------|
| 위원장      | 홍명희* | 정치인(중좌·부수상)/작가             | 문학    | 일본(도쿄 대성중학)  | 서울                    | 충북 괴산   |
| 부<br>위원장 | 정준택  | 기술자·경영인(국가계획위<br>원회 위원장)   | 공학    | 한국(경성고등공업학교) | 북한(함경남도)              | 함경남도    |
|          | 백남운* | 정치인(중좌 교육상)/학자             | 경제학   | 일본(동경상과대학)   | 서울                    | 전라북도 고창 |
| 서기장      | 한홍수  | 학자(물질문화유물조사 보<br>존위원회 위원장) | 인류학   | 오스트리아(비엔나대학) | 유럽, 대학교원<br>및 박물관     | 개성      |
| 위원       | 계응상* | 학자(원산농업대학 교수)              | 농학    | 일본(구주대학)     | 서울, 농민동맹              | 평북 정주   |
| 위원       | 김승화  | 정치인(소련계), 내각 사무<br>국장      |       | 소련           | 소련계                   | 소련      |
| 위원       | 도상록* | 학자,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 물리학   | 일본(동경제대)     | 서울(경성대학<br>이공학부장)     | 함경남도 함흥 |
| 위원       | 리병남* | 학자, 보건장                    | 의학    | 한국(경성제대)     | 서울 민전, 남조선<br>보건연맹    | 충청남도    |
| 위원       | 박창옥  | 정치인(소련계), 조선로동당<br>비서      |       | 소련(사범학교)     | 소련(지방당서기)             | 소련      |
| 위원       | 최삼열* | 학자,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 화학    | 일본(교토제대)     | 서울, 이화여대 교수           | 전라북도 전주 |
| 위원       | 최창익  | 정치인(연안계), 재정상              | 정치경제학 | 일본(와세다대)     | 중국공산당(8로군,<br>함일군정대학) | 함경북도 온성 |
| 위원       | 최창하  | 학자, 김책공업대학 교수              | 기계공학  | 일본(와세다대)     | 서울(경성대학)              | 충청북도    |
| 위원       | 최철환  | 정치인(소련계), 조선로동당<br>선전선동부장  |       | 소련           | 소련계                   | 소련      |
| 위원       | 정진태* | 학자,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 법학    | 한국(경성제대)     | 서울 민전                 | 전라북도    |
| 위원       | 김광진  | 학자,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 경제학   | 일본(동경상과대학)   | 평양 평남건준               | 평안남도    |

출전: 『보통신문』 1952년 5월 12일 기사에 기초하여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선인, 2005); 강호재, 『북한과학기술행성사 1』(선인, 2007); 『서울대학교 통계연보』(서울대학교, 2009)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근대 학력 엘리트 DB 등을 참고하여 작성.

\*표시는 월북인사임을 의미함.

총 15인 가운데 정치인이 6명, 학자 8명, 테크노크라트 1명이었다. 위원들은 북한의 대표 학자들과 정치활동가들(김승화·박창옥·최창익·최철환 등)로 구성되었다. 위원 가운데 항일빨치산 계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편 연안계(최창익) 1명, 소련계 3명(김승화·박창옥·최철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전공분야 역시 인문·사회계열이 6명, 자연·기술·의학이 6명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출신지는 38이남 출신이 7명, 38이북 출신 5명, 소련 출신 3명이다. 최종학력지로 보면, 한국 3명, 일본 8명, 소련 3명, 유럽 1명인데, 유럽에서 수학한 한홍수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으므로 사실상 15명의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원 중 9명이 일본유학생

출신이었다.

11월 8일 확정된 ‘과학원’ 구성원과 출신관계는 <표 2>와 같다.

<표 2> 과학원 조직과 주요 구성원들의 출신관계

| 조직                    |  | 이름                 | 출신지        | 학적 출신 | 정치적 계파        |           |
|-----------------------|--|--------------------|------------|-------|---------------|-----------|
| 원장                    |  | 홍명희                | 충북         | 일본    | 서울 중간파        | 월북        |
| 부원장                   |  | 최삼열                | 전북         | 일본    |               | 월북(1947)  |
| 과학서기국 서기장             |  | 장주익                | 소련         | 소련    | 소련계           |           |
| 사회과학<br>부문위원회         | 위원장  | 리청원                | 함남         | 일본    | 국내공산당/<br>장안파 | 월북(1946)  |
|                       | 경제 및 법학연구소 소장                                      | 김광진                | 평남         | 일본    | 평남건준          |           |
|                       | 역사학연구소 소장  | 박시형                | 경북         | 서울    | 국내공산당         | 월북(1947경) |
|                       |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 소장                                   | 리극로                | 경남         | 독일    | 서울 건민회        | 월북(1948)  |
|                       | 물질문화사연구소 소장  | 도유호                | 함남         | 오스트리아 | 국내공산당         |           |
| 자연 및<br>기술과학<br>부문위원회 | 위원장  | 리승기                | 전남         | 일본    |               | 월북(1950)  |
|                       | 화학연구소 소장   | 려경구                | 경기         | 일본    |               | 월북(1946)  |
|                       | 물리수학연구소 소장   | 김지정                | 평양         |       |               |           |
|                       | 공학연구소 <sup>37)</sup>                               | 김인식 <sup>38)</sup> |            |       |               |           |
| 농학 및<br>의학<br>부문위원회   | 위원장  | 최명학                | 함남         |       | 함남인위          |           |
|                       | 의학연구소 소장   | 리호립                | 충북         |       |               |           |
|                       | 농학연구소 소장   | 계응상                | 평북         | 일본    |               | 월북        |
| 상무위원회                 | 과학원 원장·부원장·서기장, 각 부문위원회 위원장 3인, 위원 3인(백남운·려경구·최창익) |                    |            |       |               |           |
| 원사<br>(총 10명)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의학         |       |               |           |
|                       | 김두봉(언어학)   | 최삼열(화학) *          | 최명학(외과학)   |       |               |           |
|                       | 홍명희(문학) *  | 김지정(수학)            | 농학         |       |               |           |
|                       | 백남운(경제학) *   | 리승기(화학)            | 계응상(잡종학) * |       |               |           |
| 박시형(역사학)              | 도상록(물리학) *   |                    |            |       |               |           |
| 후보<br>원사<br>(총 15명)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의학         |       |               |           |
|                       | 김광진(경제학) *   | 신건희(물리학)           | 최응석(내과학)   |       |               |           |
|                       | 도유호(고고학)   | 김인식(물리학)           | 리호립(이비인후학) |       |               |           |
|                       | 리청원(역사학)   | 원홍구(생물학)           | 도봉섭(생약학)   |       |               |           |
|                       | 최창익(경제학) *   | 려경구(화학)            | 농학         |       |               |           |
|                       | 장주익(경제학)   |                    | 김량하(농예과학)  |       |               |           |
|                       | 리극로(언어학)   |                    | 김중희(축산학)   |       |               |           |

출전: 『도동신문』 1952년 10월 22일 및 11월 8일 명단에 기초하여 강호재, 『북한과학기술형성사 1』, 김근배, 『월북과학기술자와 흥남공업대학의 설립』, 『아세아연구』 40-2(1997) 등을 참고하여 작성.

\*표시는 과학이카데미야 창립준비위원회(1952.5) 위원.

원사 10명 중 김두봉과 최명학을 제외한 8명, 후보원사 15명 중 9명이 월북 학자이다.

과학원 지도부에는 장주익, 리청원, 박시형, 최창익 등 공산주의자들과 홍명희(원장), 백남운(상무위원), 리극로(언어학자) 등 정파를 아우르는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균형을 이루어 포진하였다. 주요 구성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9명이 월북 과학자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과학원에 참여한 학자들은 소수의 정치가들을 제외하면 북한의 각 정치세력들과 긴밀한 연계가 없었다. 특히 김일성 중심의 항일무장투쟁 세력과의 연계는 거의 없었다.

한편 과학아카데미 창립준비위원회(5월) 서기장 한홍수와 과학원 조직(10월) 당시 과학서기국 서기장 장주익 두 인물의 면모를 보면, 당시 과학연구사업 조직에서 소련의 영향을 알 수 있다. 과학서기국은 과학원 상무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산하 연구소 및 기관들의 사업계획 집행정형을 지도·검열하며, 정부가 제기한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실시하며 사업 결과를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산하기관 간부를 선임하는 등의 임무를 지녔다.<sup>39)</sup> 그러므로 과학원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기획·지도·감독하고 간부 선발권을 가지는 과학서기국의 책임자인 서기장은 과학원 주요 사업과 인선을 관할하는 실무 책임자였다고 볼 수 있다.

한홍수는 소련 학문 도입에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일본 소피아대학[上智大學]에서 원시사회사를 전공한 후 유럽으로 건너가 오스트리아에서 인류학을 연구, 이후 스위스에서 조선상고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7년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에서 하빌리타치온(강의교수) 자격을 취득한 후, 김일성의 특별 초빙에 의해 1948년 경 평양에 들어와 조선물

37) 1952년 12월 29일 제3차 과학원 상무위원회에서 창설 결정(『과학원의 연혁』, 23~24쪽).

38) 『로동신문』 1954년 11월 29일.

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규정(1952년 10월 9일 내각 결정 제183호로 승인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학보』 1, 1953, 187쪽.

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맡았다. 이후 비엔나학파의 학설을 버리고 스탈린주의 물질문화학 연구를 적극 도입하였다.<sup>40)</sup> 따라서 한홍수를 서기장에 임명한 것은, 소련 ‘선진과학’ 도입에 관한 김일성과 북한 당국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홍수가 남로당사건에 연루되어 숙청되자,<sup>41)</sup> 과학원 과학서기장에는 소련 출신 장주익이 임명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당국은 과학자들의 자율적이고 민족주의적 집단으로서 조직된 과학원 내에서도 소련 학문 도입과 국가주도적 계획경제·산업발전을 위한 일원화된 동원체제의 마련이라는 목적을 관철시키려 했다. 소련이 도달한 과학기술 수준에 하루빨리 도달하는 것, 그것이 북한에서 과학기술연구의 조직화를 도모한 중요한 이유였다.

#### IV. 과학원 활동과 ‘당적 통제’

##### 1. 초창기 과학원의 사업과 성과

과학원 창립 당시 국가는 과학자들에게 상당한 권위와 임무를 부여했다. “유구한 역사와 과학문화유산을 가진”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복구 건설사업에 기여하고 대중교양과 과학의 선진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과학원의 목표가 광범하게 선전되었다. 1953년 12월, 과학원 과학서기장

40) 전경수, 「평양정권이 숙청한 인류학자 한홍수: 굴절과 파행의 ‘고려인류학’」, 『근대 서지』 11, 2015, 415~420쪽; 류승주, 「해방 직후 북한 문화유산 보존사업과 조선 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 『한국근현대사연구』 103, 2022, 221~225쪽.

41) 문화유산편집부, 「민족문화유산 계승 발전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빛나는 승리」, 『문화유산』 4, 1959, 4쪽.

장주익은 과학원의 1년 사업을 돌아보며 “(과학원은) 조직 기구와 시설들을 부단히 확충 강화하면서 수많은 과학일꾼들을 육성”하였고 국방력 강화와 전시 생산 제고, 국가의 인민민주주의 제도와 정치·경제·문화적 위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하였다.<sup>42)</sup> 과학원 제2차 총회에서는 과학원이 창립 후 1년간 117개 연구과제를 진행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했다.<sup>43)</sup>

그러나 공개된 발표와 달리 과학원 초기 연구활동은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장주익은 소련대사관 직원들에게 과학원 사업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곤 했다. 그는 과학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정원은 절반 정도밖에 충원하지 못하였는데, 그중 자격을 갖춘 과학연구일꾼은 50명 뿐이며 그마저도 상당수가 당·국가 사업에 복무하느라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과학원 청사조차 마련되지 않아 과학자들은 불만투성이에 하는 일 없이 무위도식하고 있다고도 비난하였다.<sup>44)</sup> 백남운은 과학원 사업이 1956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털어놓으며 준비된 간부가 없어 곤란하다고 호소하였다.<sup>45)</sup> 리청원은 “과학자들을 불필요한 행정적 사무와 각종 갑빠니야 사업에서 해방”시켜 과학자들의 본신 사업인 과학 연구에 몰두할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sup>46)</sup>

실제로 과학원 사업은 순조롭지 못했다. 전시의 긴절한 요구와는 반대

42) 장주익,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에서의 과학일꾼들의 임무」, 『로동신문』 1953년 12월 1일.

43) 『과학원의 연혁』, 38쪽.

44) 「소련대사관 제1서기관 바코프 I.S.의 일지(1954년 3월 2일)」, 『북한관계사료집』 77, 14~17쪽; 「소련대사관 제1서기관 삼소노프 G.E.의 일지(1955년 3월 19일)」, 『북한관계사료집』 77, 118~122쪽.

45)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6년 6월 11일)」, 『북한관계사료집』 73, 463~464쪽.

46) 「리청원동지의 토론」, 『로동신문』 1956년 4월 28일.

로, 연구공간·인력·물질적 지원 등 모든 조건이 열악하였기 때문이다. 전쟁 기간 박물관들은 폭격으로 파괴되거나 불타 없어졌다.<sup>47)</sup> 과학원 소속 연구원들은 대부분 대학교직 등 다른 직무를 겸임하고 있었으므로 과학원 연구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웠다. 연구소들은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되었으므로 각 부문의 유기적·통합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또한 소련의 원조자금 중 150만 루블이 책과 연구설비로 과학원에 보내졌으나,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는 처지였다.<sup>48)</sup> 다만 리승기·주종명·마형옥·려경우·계응상 등 일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활동은 각 실험실 단위로 꾸준히 진행되었다.<sup>49)</sup> 그러나 이 사업들은 과학원 개원 이전부터 “지도자” 김일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므로 애초에 과학원과 무관하다. 따라서 1950년대 후반 리승기·계응상 등의 과학적 성취를 과학원 창설의 효과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과학원 상층 인사들이 종종 증언하였듯 과학원이 이념 형성이나 사상통일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이렇듯 과학원 창립 후 1년여가 지나도 사업 성과가 없고 개선 여지가 불투명하자 당중앙위원회는 과학원을 폐지를 고려하기까지 하였다.<sup>50)</sup>

초창기 과학원 구성원들은 당·사회단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사업에 동원되었다. 동원은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노력동원과 정치적 행사 참여 등이었다. 평양시복구위원회 결정에 따라 ‘스탈린거리’ 조성을 비롯한 평양시 복구건설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고, 노동자, 학생, 사

47) 『민주조선』 1951년 3월 3일.

48)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 1955년 10월 12일」, 『북한관계사료집』 73, 315~317쪽.

49) 강호제, 『북한과학기술형성사』, 119~121쪽.

50) 「소련대사관 제1서기관 바코프 I.S.의 일지(1954년 3월 2일)」, 14~17쪽; 「소련대사관 제1서기관 삼소노프 G.E.의 일지(1955년 3월 19일)」, 118~122쪽;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6년 6월 11일, 14일)」, 『북한관계사료집』 73, 463~464, 466~467쪽.

무원 등 모든 평양시민들이 조직적으로 노력동원에 투입되었다.<sup>51)</sup> 과학원 소속 연구원은 직장별로 소대를 편성하여 서평양·모란봉 일대 건설사업에 주야로 투입되고, 작업단위별로 경쟁운동을 벌였다.<sup>52)</sup> 젊은 연구원뿐 아니라 원사(최삼열·최명하·박시형), 후보 원사(장주익·김인식·도봉섭) 등 주요 간부들도 여러 차례 복구건설사업에 동원되었다.<sup>53)</sup>

각종 캠페인과 시위대회 참여 활동도 요구되었다. 특히 간부급 인사들은 주요한 국내외적 사안에 북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군중대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관련 논설이나 논평을 저술하여 발표해야 했다. 1950년대에는 ‘평화옹호운동’이 서구의 좌파 지식인들의 대거 참여와 사회주의 각국의 주도로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자 북한의 지식인 역시 여기에 적극 참여했다. 과학원 간부나 원사·후보원사들은 북한의 대표적 지성인들로서, 이들의 목소리는 북한 체제 옹호와 선전, 대남공세에 힘을 실어주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환영행사에 참석했고, 정부 문화대표단의 일원으로 외국과 교류하였다. 과학원은 국가가 제시하는 사업들을 차츰 진행해 나갔고, 과학원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대내외적 교류와 각종 행사 참여 등은 일정한 정치적 가치를 가졌다.

각국 과학원과 북한 과학원의 교류사업은 상징성 뿐 아니라 실질적 차원에서도 중요했다. 북한 과학원 개원식에 소련, 중국,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과학원과 몽고 과학위원회, 독일 물리

51) 평양 대학생들의 복구건설사업 동원에 대해서는 성혜량,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0, 257~258쪽에 묘사되어 있음.

52) 「전후건설사업에 나선 과학일꾼들의 활동」, 『로동신문』 1953년 10월 9일; 「건설의 노래 우렁찬 영웅 도시 평양의 밤」, 『로동신문』 1954년 7월 16일; 「누가 승리자로 될 것인가?」, 『로동신문』 1955년 3월 26일.

53) 『로동신문』 1955년 4월 10일. 그 외에도 1956년 과학원 노력협조대, 1958년 단층 문화주택 공사 동원에 관한 기사들을 발견할 수 있다. 『로동신문』 1956년 3월 17일; 『로동신문』 1956년 4월 8일.

학회에서 축전을 보내온 이래<sup>54)</sup> 북한 과학원은 각국 과학원과 교류를 이어갔다. 처음에는 과학원을 매개로 서적과 기자재를 지원받았고, 점차 연구발표회를 통해 교류하는 데까지 진전되었다. 또한 과학방문단을 교류하였다. 과학원 창설 초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외국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였으나, 점차 전문영역별로 1~2인의 소규모 방문단을 꾸려 교류하기 시작하였고, 1960년경에는 여러 나라들과 과학기술협정을 맺으며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1950년대 중반에는 소련이 주도한 합동핵연구소에 참여하였다.<sup>55)</sup> 1955년 12월 일본에서 결성된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는 특히 긴밀한 교류를 맺었다.<sup>56)</sup>

산업·생산부문간 과학협력사업은 과학원 설립 당시의 일차적 과업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농학연구소가 우선 종자개량사업, 선진영농법 보급사업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1953년 12월에는 과학원 자연 및 기술과학 부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복구 건설을 위한 조사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전시복구 3개년 계획 수행 및 1957~1961년 5개년 계획 작성을 위한 전반적 준비사업 및 조사·정리사업이었다. 또한 흥남비료공장 복구 건설을 위한 조사·정리사업, 각지 제련소에 대한 조사·정리사업을 통하여 전후 산업시설의 복구 건설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은 각 연구소 및 연구단체들과 매개하여 점차적으로 진행되었다.<sup>57)</sup>

사회과학부문위원회 사업은 주로 학술보고회들로 진행되었다. 과학문화유산 계승 발전을 위한 관계부문 일꾼 토론회(1953년 7월),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 주관 '훈민정음 창제 510주년 기념보고회'(1954년 1월), '주

54) 「과학원 개원식에 보내온 외국 과학원 축전들」, 『과학원의 연혁』, 117~123쪽.

55) Donghyun Woo, "Leveraging Uneven Cooperation: Socialist Assistance and the Rise of North Korea, 1945-1965",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22, chapter 2.

56)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결성」, 『로동신문』 1956년 1월 14일.

57) 「전후건설사업에 나선 과학일꾼들의 활동」, 『로동신문』 1953년 10월 9일.

시경 서거 40주년 기념보고회'(1954년 7월) 등으로, 민족문화전통 계승 발전의 영역이 많았다. 경제법학연구소는 맑스-레닌주의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했다. 고전 번역 출판은 사회과학부문위원회의 중요사업이었다. 사회과학위원회 뿐 아니라 여타 분과에서도 전통지식의 발굴과 계승은 중요한 임무였는데, 의학연구소의 동의학 연구사업이 대표적이다.<sup>58)</sup> 한편 출판사업 강화를 위하여 과학원 산하 출판위원회를 두었다. 1953년 현재 과학원 출판위원회는 위원장 홍명희, 부위원장 최삼열·장주익, 위원에 리청원·리승기·최명희·백남운으로 구성되었다. 과학원은 창립 후 1956년 초까지 정기간행물 6종 28만 8천여 부, 단행본 27종 17만 8천여 부를 출간하였다.<sup>59)</sup>

이처럼 과학원은 창설 후 한동안 연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한국전쟁 이전부터 축적된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과학 및 농학·화학 등 일부 연구분과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차 활발해졌다.<sup>60)</sup> 과학원 청사와 직원 주택도 마련되어 1956년까지 청사 11동과 직원 주택 400세대가 건설되어 비로소 각 연구소들이 평양에 집결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sup>61)</sup>

58) 1956년 4월 19일, 내각은 한의학을 발전시키며 한방치료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한 명령 제37호를 시달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의사들을 인민보건사업에 포섭하고, 보건성 내에 지도부서를 설치하고 한의학기술협의회를 조직하여 한의사들을 교육 또는 재교양하였다. 「한의학을 발전시키며 한방치료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내각명령 시달」, 『로동신문』 1956년 4월 26일.

59) 「리청원동지의 토론」, 『로동신문』 1956년 4월 26일.

60) 1953~1956년 사이 과학원 각 부문별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과학원의 연혁』, 39~63쪽에 정리됨.

61) 『과학원의 연혁』, 64~65쪽.

## 2. ‘검열 면제’ 특권과 당적 통제의 관철

북한 당국은 과학원 인사들에 부여한 특권 중 하나로 출판 및 대외교류에서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였다. 과학원 <규정>은 과학원의 특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5. 과학원의 특권

44. 과학원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원에서 발행되는 출판물과 저서는 검열을 받지 않는다.
45. 과학원은 검열을 받지 않고, 자체의 모든 간행물을 외국에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와 동일하게 과학원에서 국외로부터 구입하는 서적, 출판물도 또한 검열에서 면제된다.
46. 과학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도서를 국외에서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47. 과학원에서 국외로부터 구입하는 도서 및 기타 연구용 기재 일체는 직접 과학원에 송달된다. (후략)<sup>62)</sup>

과학원에 검열 없는 출판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과학원 조직과정에서 사실상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과학원 간부와 원사·후보원사로 배치되었기에 가능한 조치였으며, 노동당과 국가가 과학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시였다. 나아가 북한 과학일꾼들이 북한 권력기구의 요구에 갈등 없이 부응할 것이라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했다.

과학원 내부에는 과거 ‘조선학술원’ 등 민족주의적 학술운동을 인적·정신적으로 계승한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북한 지도부는 이들을 포

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규정」, 188~189쪽.

용하기 위하여 예우를 갖추고 대우하였다. 김일성은 과학자대회 연설의 서두에서 “정부와 로동당은 인텔리들과의 사업에 항상 특별한 주의를 돌려 왔으며 그들의 장성과 민주주의적 정신에 의한 그들의 교양과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에 그들의 적극적 참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왔습니다. 인텔리들은 우리나라의 큰 력량이며 귀중한 보배입니다.”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하였는데,<sup>63)</sup> 이는 지식인들의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민족주의적 참여 열망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표명한 것이다.

과학자대회 최종일 발표된 과학자들의 결의문은 북한 과학자·지식인들이 어떠한 사상적·정치적 입장에 있었는지 보여준다.

“우리들은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과학 사상을 널리 보급시키며 맑스-레닌주의와 변증법적 유물론의 학설을 과학 연구의 실제 사업에 알맞도록 적용하며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옹기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애국적 전통을 밝히어 인민대중을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민족적 자부심을 배양하여 전쟁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하며 선진적 사회 제도에 대한 사랑과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겠습니다.”<sup>64)</sup>

즉 과학자들은 맑스·레닌주의와 ‘변증법적 유물론의 학설’을 연구사업에 “알맞도록 적용”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는데, 이는 김일성이 이전부터 강조했던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또한 1950년대 중반 김일성이 주창하여 이후 북한사회에 내면화되는 ‘주체’의 실제 내용이기도 하다.<sup>65)</sup>

63) 김일성, 「과학자대회에서 진술한 연설」, 114~115쪽.

64) 「김일성 장군에게 드리는 메세지」, 『로동신문』 1952년 5월 7일.

65) 류승주, 「1950년대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 민족문화유산 계승 문제」,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64, 2022, 제2장 참고.

1950년대 초반의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권위, 인민정권에 대한 충성, 애국, 소련에 대한 존경과 추종에는 합의되어 있었고, 이견을 표출할 수 없었다. 특히 맑스-레닌주의는 지도적인 사상이자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졌다. 백남운이 과학자대회 기조 연설에서 해방후 소련군과 북한 정권의 위업을 찬양하며 “가장 선진적인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올바른 세계관에 입각한 과학 문화는 자유로운 발전의 온갖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발언했고,<sup>66)</sup> 김일성 역시 과학자대회 연설 내내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가치와 스탈린이 지도하는 소련 과학문화의 위업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기보다 ‘실제 사업에 알맞도록’ 적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던 것이다. 과학자들은 문화적 전통, 애국주의, 국제주의 등의 가치를 맑스-레닌주의와 병렬시켰다.

과학원의 창설은 과학자들을 과학원 조직 안에 결집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권위를 부여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가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강제하였다. 전시의 극한 상황은 과학자들에게 “력사의 창조자인 로동대중”을 본받아 대중적 생산운동과 결부하여 자기 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이 되었다. 과학원 사회과학부문위원장 리청원은 소속 과학자들에게 “인민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인민정권의 공고화를 위하여 자기의 력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며 인민들을 국제주의 사상에 립각한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의 무궁무진한 정신적·물질적 력량을 동원함에 자기의 최대 력량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sup>67)</sup>

1952년 말~1953년 사이 남로당파에 대한 대대적 숙청과 비판이 진행되자 당원들에 대한 사상검열이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과학원

66) 「1951년 공화국 과학연구사업의 총결과 1952년 당면과업에 대하여-교육상 백남운.」

67) 리청원, 「과학원의 창립과 사회과학부문의 과업」, 『로동신문』 1952년 11월 16일.

내부의 사상적 자율성은 억압되었다. 특히 정전 직후인 1953년 9월 17~18일 진행된 전국사회과학자대회는 전후복구를 위한 사상총동원 사업에 사회과학자들이 앞장설 것이 요구되었다. 대회에서 로동당 선전선동부장 김창만은 과학 활동을 북한 사회발전에 수응시키며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과학 부문 과학자들은 노동계급의 사상교양사업에 기여해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은 과학연구사업을 대중적 생산운동에 결부시키며, “반동사상”의 침식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을 혁명적 의지와 강인성, 고상한 애국주의적 헌신성과 창발적 열성으로 고무하여 복구건설과 생산현장에서 헌신하도록 교양할 것을 주문하였다. 과학원 사회과학부문위원장 리청원은 국가건설에 임하는 사회과학자들의 과업을 구체화하였는데, 소련 문헌을 번역 출판하여 소련 사회과학 성과를 섭취하고 김일성 문헌을 연구하여 과학연구사업의 지침으로 삼을 것, 연구 주제 선정은 국가적 과제를 우선시할 것, 민족 과학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하고 고전을 수집 정리할 것, 인민대중 속에서 애국주의 사상을 배양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킬 것, 과학연구사업에서 집체성을 더욱 강화할 것 등이었다.<sup>68)</sup>

사회과학부문위원회 연례회의에는 내각 부수상 겸 과학원 원장인 홍명희를 비롯하여 최고인민회의 의장 리영, 당중앙위원회 사회과학부장 하양천, 교육상 백남운 등 당과 국가의 주요부문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총화 보고와 토론들은 “과학에서 당성을 고수”하는 당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고, 구성원들의 사상적 통제와 일원화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sup>69)</sup> 북한 사회의 정치적 경직화 속에서 과학자들이 각종 동원

68) 「인민경제 복구 발전 및 사상전선에서의 사회과학부문의 전투적 과업들을 토의」, 『로동신문』 1953년 9월 20일; 「공화국의 민주 발전과 사상 전선의 승리를 위한 사회과학자들의 실천 결의 표명」, 『로동신문』 1953년 9월 22일.

기계에 포섭되면서, 과학원 사업은 점차 당의 이념에 장악되어 갔다.

1956년 조선로동당 3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사회과학부장 하양천은 과학원 역사연구소의 집필 관점을 격렬히 비판하였다. 교육·지식·문화예술계에서 부르주아적 사상관점과 관념론적 방식이 남아있다고 비판하면서 과학원 역사연구소의 <조선력사 년대표>가 “왕조사적이며 심지어 정치적·사상적으로 인민들에게 해독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무책임하게 편집”되었던 일이 있다고 밝혔다.<sup>70)</sup> 이는 과학원 역사편찬에 당적 검열이 시행되었음을 증명하는 발언이다. 에 대한 당적 ‘검열’ 면제 특권이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가혹한 검열이 실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선통사』 출판 역시 조선로동당의 개입으로 여러 번 지연되는데, 당의 ‘전통’ 수립 방침이 역사학자들의 견해와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더 컸다.<sup>71)</sup> 1950년대 중반 역사학자들은 한국사 계통을 세우기 위한 연구·저술활동을 펼쳤으나 이는 ‘사적 유물론’을 한국사에 적용하려는 당의 요구에 합치하지 못했다. 이처럼 과학원 창립 당시 북한 당국이 과학자들에게 연구의 자유를 부여했던 원칙에 어긋나게, 국가는 학문영역에 대한 개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1958년에 이르러 당은 역사학연구소의 연구 방향을 직접 지시하여 ‘당적 원칙’에 위배되는 역사서술들을 개조하도록 개입하였다.<sup>72)</sup>

69) 「1954년도 과학원 사회과학부문 회의 진행」, 『로동신문』 1954년 11월 19일.

70) 「하양천동지의 토론(함북도당단체 대표)」, 『로동신문』 1956년 4월 26일.

71) 김영숙, 「『조선통사』(하)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9년 5월 12일.

72) 류승주, 박사학위논문, 4장 1절 2항 참고.

## V. 맺음말

이상에서 북한 과학원의 창설과 초기 활동에 대하여 과학원 설립 결정 과정, 과학원 조직과 인적 구성, 주요 사업과 자율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951년 말 한국전쟁이 소강상태에 이르자 북한은 전후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학술부문 사업을 중앙집권적으로 통합·체계화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자연·기술과학분야는 국가계획위원회 과학연구국을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여 내각 및 산업부문과의 원활한 연계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인문·사회과학부문은 정치경제학아카데미에 통합하여 중앙집권화한다는 이원적 체제를 특징으로 하였다. 과학기술부문의 중앙관리기구로 1952년 초 국가계획위원회 산하에 조직된 과학연구국은 그 첫 사업으로 ‘과학자대회’를 소집하여 국가의 과학·기술인력 동원방침을 확인시켰다. 그런데 대회 토론 과정에서 과학원 창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고 김일성이 과학원 설립을 결정함에 따라 애초의 구상이 변경되었다. 대회 종료 후 1주일여의 내부논의 결과 애초의 이원적 관리체제는 수정되었다. 이원적 체계가 아닌 단일화된 체계로서, 그리고 국가계획위원회라는 내각기구가 아닌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과학아카데미의 형태로 전체 과학연구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연구기관 설립이 결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과학원 창설 과정은, 북한 정권당국의 결정이 행위자 대중의 논의과정에서 변경되는 사례로서 주목된다.

과학원 주요 인사들의 상당수는 해방 후 자립적 민족국가 건설에 참여하고자 했던 민족주의적 지식인으로서, 신국가 건설에 학술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준(準) 정치적 자기실현 욕구를 표출하였다. 한편으로 북한 정권은 소련 사정에 해박했던 인사들을 과학원 서기장으로 배치함으로써 소

런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북한의 과학기술적 역량을 급속히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즉 과학원은 국가주도적 과학기술 지도기관으로 기능하였던 이면에서, 자주적 근대민족국가 수립에 대한 민간 과학자들의 열망을 응집 분출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과학원은 설립 과정에서부터 국가의 필요와 민간의 자율적 참여가 반영되었고, 인원 구성을 통해서도 참여와 동원의 이중주라는 긴장과 활력의 매커니즘을 포착할 수 있다. 북한에서 지식인·과학자들은 과학원에 결집되어 북한의 국가적 목표에 부응하는 연구활동에 몸담게 되었으나, 그것만으로 과학원을 국가주도형 학술동원기관, 관제연구기관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과학원 구성을 통하여 북한의 통합적 연구기구가 탄생하여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개입이 실현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학원은 국가기관에 다만 복종하는 기관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자율적으로 집결한 활동무대로서 출발하였다. 북한 당국은 과학자들을 예우하고 검열 면제의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전후복구의 긴급한 상황과 과학원 구성원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맞물려 과학원의 사상적 경직성은 점차 심화되었고, 일련의 정치적 숙청을 거치며 사상분야에 대한 당적 통제는 강화되어갔다.

(2023.07.09. 투고 / 2023.07.31. 심사완료 / 2023.08.09. 게재확정)

[Abstract]

###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the Academy of Sciences of DPRK in the Early 1950s: Autonomy and Mobilization**

Ryu, Seung-ju

This article analyze the establishment decision process, personnel composition, initial activities, and autonomy issues of the Academy of Sciences of DPRK(AS). AS was established in 1952. At that time, AS, as a comprehensive research institute, dealt with both the natural and technic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originally intended to control science and technology projects by establishing the Science Research Bureau in the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However, this plan was changed to establish AS at the request of Scientists who insisted on the autonomy of research. AS, after all, set up not only as a national agency for guida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as an academy for semi-political self-actualization of members who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making their nation-state.

□ Keyword

the Academy of Sciences of DPRK, The National Scientists Convention, Worker's Party of Korea, Kim Il-sung, Baek Nam-woon, Han Hung-soo, Academy of Political Economy,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 [참고문헌]

- 『로동신문』 『민주조선』 『정로』  
 『북한법령집』 4, 대륙연구소, 1990.  
 『김일성선집』 4,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초판)·1954(제2판).  
 『김일성저작집』 7,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일성전집』 15,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인민들 속에서』 1·4, 조선로동당출판사, 1962·1969.  
 과학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의 연혁』, 과학원출판사, 1957.  
 과학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학보』 1~7, 1953~1954.  
 과학원 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문화유산』 4호, 1959.  
 과학원 역사연구소, 『력사과학』 I·II, 과학원출판사, 1955~1959.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 상·하, 과학원출판사, 1956·1958.  
 국사편찬위원회 편, 『남북역사학논총』 1~8, 국사편찬위원회, 2001~2004.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22, 23, 24, 30, 73, 77.  
 김광운 편저, 『북조선실록: 년표와 자료』 1~160, 2018~2023.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10년사』, 평양:1956.  
 윤명수, 『조선과학기술발전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 1951~1952, 1953, 1956, 1958.  
 강호제, 『북한과학기술형성사 1』, 선인, 2007.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선인, 2003.  
 김용섭, 『남북 학술원과 과학원의 발달』, 지식산업사, 2005.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김근배, 「월북 과학기술자와 흥남공업대학의 설립」, 『아세아연구』 40(2), 1997.

- 류승주, 「1950년대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 민족문화유산 계승 문제」,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64, 2022.
- 류승주, 「해방 직후 북한 문화유산 보존사업과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 위원회」, 『한국근현대사연구』 103, 2022.
- 이주철, 「북한의 조선로동당사 서술 현황 연구」, 『북한의 한국사 연구동향 (2)』,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성혜량,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0.
- 張超, 「북한의 공업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 연구(1945~1970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전경수, 「평양정권이 숙청한 인류학자 한홍수: 굴절과 파행의 '고려인류학」, 『근대서지』 11, 2015.
- Loren R. Graham, *The Soviet Academy of Sciences and the Communist Party, 1927~1932*, Princeton Univ. Press, 1967.
- Donghyun Woo, "Leveraging Uneven Cooperation: Socialist Assistance and the Rise of North Korea, 1945-1965",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22.
- Laumulin, Chokan, "Science and social policy: underpinning of Soviet industrial paradigms," Ph.D. diss., University of Cambridge, 2019.